



US-CHINA WATCHING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US-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美政策研究所

2021. 01. 05 <제32호>

바이든 시대의 미중 경제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안

이 왕 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책 제언

바이든 시대에 미중 경제패권 경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

- 미중 사이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계속 심화될 경우, 미중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 미중 갈등에 대해 편승과 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차별화된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완화/우회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환경-에너지 협력,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는 디지털 협력을 각각 추진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 해결에 치중할 경우 중국의 보복 시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바이든 시대에 미중 경제패권 경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

미중 경제 패권 경쟁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함

-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영역은 우적(友敵) 구분에 입각해 정부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안보 영역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현재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경우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더 빨리 줄어들 경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무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제재를 즉시 해제하지 않고 중국의 대응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약하였음
- 환경(기후변화) 및 보건(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음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 중국은 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 미국과 탈동조화/신냉전에 대비하고 있음
- 2020년 12월 말 중국은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EU와 동맹 재건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상당히 약화시키는데 성공하였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함께 하는 다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일방주의적으로 적용한 트럼프 행정부와 근본적 차이가 있음

문제 제기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함께 하는 다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일방주의적으로 적용한 트럼프 행정부와 근본적 차이가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방기한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 민주주의강화를 추구할 것임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중시하는 동맹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
-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 위협에 노출된 중산층에 돌 것임
-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그린뉴딜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같음

-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증한 반중 여론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음
- 퓨리서치의 대중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적 응답이 2019년 60%에서 2020년 봄 66%, 가을 73%로 증가하는 추세임
- 민주당 대선공약에 들어 있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따르면, 연방정부 예산에 향후 4년간 7,000억 달러를 배정하여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예정임
- 바이든 당선자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5%인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모은다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을 경쟁자로 본다는 점에서 대중 압박의 수단과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안보, 인권, 무역 등에서는 압박하지만 환경(기후변화)과 보건(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으로 보임
- 동맹국에 대해서는 일방적 편승을 요구하기 보다는 미국을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였음

무역정책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정됨

- 무역정책의 기초는 제재를 남용한 보호주의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안으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임
- 경쟁력을 충분히 향상되어 중산층이 안정되기 전까지 대외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제재는 해제하지 않고 중국의 대응을 당분간 지켜볼 것으로 보임
-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임

2035년까지 전기발전, 2050년까지 전체 경제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대외경제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

- 그린뉴딜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에너지-환경정책인 동시에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점에서 산업-고용정책이기도 함
- 백악관에서 그린뉴딜 정책 전반을 조율할 기후변화 특사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내정하였음
- 파리 협약 복귀하는 것은 물론 고탄소상품에 관세 부과라는 무역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개발도상국에 대해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중지하는 반면, 녹색정책에 대해서는 대외원조를 제공한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음

2035년까지 전기발전, 2050년까지 전체 경제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대외경제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

2. 주요국의 대응 방식 비교

중국은 탈동조화와 신냉전의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발전방식(新发展格局; new development pattern)인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하였음

- 국내대순환은 수요측 개혁(需求侧改革)을 통해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 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임
- 국제대순환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또는 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의 수입대체를 가속화하는 정책임
- 과도한 무역의존이 초래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대순환을 국제대순환에 우선하는 것이지, 국제대순환은 국내대순환에 집중하기 위해 폐기되어야 하는 낡은 유산이 아님
- 국제대순환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후퇴하는 대신 지역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은 첨단기술의 제공할 수 있는 일본, 한국, 대만(?)과 풍부한 노동력 및 시장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독일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편승하기보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에게 방위비 인상, 노드 스트림2 프로젝트 폐기, 화웨이 5G 통신장비 도입 금지를 요구하였음
- 메르켈 정부가 이런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6월 주독 미군 규모를 6월 주독 미군을 35,400명에서 24,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이 결정된 이후 독일 정부는 미국의 '유럽 에너지안보정화법'이 통과된 2019년 말부터 중단하였던 노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 공사를 재개하였음
- 독일 의회는 5G 통신장비에 대해 독자적 규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음
- 독일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을 성사시킴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성공하였음

쿼드 회원국인 일본과 인도도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 참여를 꺼리고 있음

- 2020년 10월 도쿄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안한 공동명안이 채택되지 않았음
- 일본, 인도, 호주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
- 대중강경론을 세 나라 모두 거부한 것은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호주에서 1위, 일본에서 2위, 인도에서는 3위)로 설명되고 있음

호주는 스콧 모리스 총리가 2020년 4월 코로나 19 전염병의 발원지를 직접 조사하자고 제안한 이후 중국의 전랑외교(战狼外交)의 표적이 되었음

- 호주에서 대중 무역은 2019년 전체 무역의 27.4%, 국내총생산(GDP)에 약 11% 기여할 정도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음
- 주호주 중국대사관이 공개한 14개 요구사항에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5G 사업에서 배제, 중국 기업이 추진한 호주 기업의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불허, 중국이 내정문제로 간주하는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을 갈등요인으로 적시하였음
- 중국은 보리, 소고기, 석탄, 면화, 바다가재, 목재, 와인 등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이 상품들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가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 를 단기간에 만회하는 물론 축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공격하는데 앞장서 왔지만, 미국은 중국의 호주 때리기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 미국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호주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WTO에 제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중국은 탈동조화와 신냉전의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발전방식(新发展格局; new development pattern)인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하였음

국제대순환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또는 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의 수입대체를 가속화하는 정책임

국제대순환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후퇴하는 대신 지역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바이든 시대 미중 경제패권 경쟁의 변화 양상을 잘 파악하여 미국과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3. 한국의 대응 방안

바이든 시대 미중 경제패권 경쟁의 변화 양상을 잘 파악하여 미국과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과제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폭 확대한다면 한미 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것임
- 중국에 대해서도 쌍순환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사드 배치 이후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음
- 한국판 뉴딜의 한 다른 축인 디지털 뉴딜은 중국의 신형인프라(新基建) 방안에 부합함

미중 경제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입각해야 함

- 무역전쟁 발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늘지 않았으며 탈동조화도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 미중 사이에 패권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첨단 제품의 교역은 줄어들었지만, 소비재 및 의약품 교역은 무역전쟁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제1단계 무역합의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금융기관의 대중 투자도 점증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이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과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통한 탈중국도 아직까지 본격화되고 있지 않음

미중 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결적 자세를 지양하고 협상을 통한 설득에 주력해야 함

- 미중 경쟁의 영역과 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념과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선형적으로 예단해서는 안 됨
- 협상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방안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동맹국을 예전처럼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함

바이든 행정부가 메가 FTA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보호주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일 FTA 협상과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무역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강화하여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인도와 교역을 확대해야 함
- WTO, IMF, 세계은행, OECD를 포함하는 다자 국제기구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미중 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결적 자세를 지양하고 협상을 통한 설득에 주력해야 함

발행처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